

“핵무장론 한미동맹 깨자는 위험한 주장”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일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켜기
야당 “사드 경제피해 수십조” 국방장관 등 사퇴 촉구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국회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논쟁을 끌었다.

◇“전술핵 배치하자”=이날 일부 의원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 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의 핵을 막기는커녕 한반도의 핵 대결을 촉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제재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고 반대했다.

◇사드 배치=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같았다. 여당 의원은 사드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풀고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야당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며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를 3개 포대 정도는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을 향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구태에서 벗어

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장사정포나 미사일을 발포했을 경우에 공중폭발 한다면 지상폭발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드가 대응책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 사드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리스크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드 1개 포대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로 보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와 대북·북핵 정책 실패로 무려 3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통일·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브리핑

“北 이탈주민 정착 최대 난관은 취업·정서 불안”

국민의당 박주선

북한 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심리적 문제 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광주 동남을)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북한 이탈주민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총 22만42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상담 항목으로는 취업이 3만54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리·



정서 3만4206건 ▲건강 3만87건 ▲교육 2만4456건 ▲가정문제 1만5016건 ▲주택 1만2485건 순이었다.

박 부의장은 “북한 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3%로, 일반 국민의(2.4%)의 13배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주로 상담하는 취업과 심리·정서 등 문제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깔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농식품부 고위급 퇴직자 76% 관련 협회 재취업”

국민의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관련 협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농식품부 4급 이상 공무원의 모두 21명이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16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이들이 취업한 협회는 (사)한국국제농협, 한국대미사료협회, 대한제당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해와농업개발협



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이다.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16명의 퇴직공무원 가운데 전무 이상으로 재취업한 사람은 15명으로 94%에 해당했다. 나머지 5명은 기업이나 연구원, 공기업 등에 재취업했다.

황 의원은 이들 퇴직공무원이 농식품부와 연관된 협회에 재취업함에 따라 관련 사업 내지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기권한 3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정의당 김중대 의원, 국민의당 김중희 의원이다. 심 의원은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외통위원장으로서는 외통위에서 제안한 결의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 의원은 결의안의 일부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김 의원의 기권표는 단순 기기조작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북당 절차 중인 이해찬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제7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들으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안보 전문가들 뭉쳤다

‘미래안보포럼’ 출범...안보 해법 연구 입법·정책 반영

여야 안보분야 전문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과 대령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중대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안보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

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병관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 10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이 포럼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민하고 평화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지향하며, 그 결과를 입법

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안보는 우리의 생명이다”며 “군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한 것은 군의 발전을 위해 지적하겠다”고 격려했다.

김영우 의원은 “북핵을 동결할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날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개발단장의 ‘과학기술계와 함께하는 국방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활동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또 무산 될듯

운영위, 단독 입후보 부결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됐던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이 또 다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당 위원장에 홍우석 전 부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지만, 시장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장위원장 선출은 시장대회를 통해 재직 대의원 과반수 이상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시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중앙당은 당협위원장 중 시장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이번에 당협위원장이 도전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2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장위원장 문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면서 “시장운영위에서는 부결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파전으로 전개된 시장위원장 선거는 재직 대의원 과반(21명) 미달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